

# “국민적 동의 얻을 수 있는 5·18 진실규명 노력하겠다”



송선태 5·18진실조사위원장이 2일 광주일보사 회의실에서 진상조사위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

## 송선태 5·18진실규명조사위원장 인터뷰

### 헬기·지상 발포명령자 규명...행불자·암매장지 찾기 등 집중 광주·서울서 5·18 청문회 등 1년 남은 조사위 활동 각오 다져

“조사기간이 채 1년이 남지 않았지만 광주 지역 민 뿐만 아니라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5·18 진상조사 결과를 내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실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 위원장은 2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년 남은 진상조사위 활동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송 위원장은 “피해자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데 남은 기간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헬기·지상) 사격 발포명령자 규명 ▲행방불명자와 암매장지 찾기 ▲계엄군의 성폭행 사실 확인과 가해자 규명 등 세가지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 의지를 밝혔다.

3대 사안은 5·18특별법 제정의 배경이 됐다는 점에서 반드시 진실을 국민들 앞에 밝히겠다는 것이

다. 특히 그동안 계엄군의 일부 자백 등을 토대로 최소한 작전지역 일시와 장소별로 부대를 특정하는 일까지는 마무리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발포명령자에 대한 진실규명은 청문회를 통해 전 국민에게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 다. 구체적인 일시는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늦어도 올해 6월 안에 광주와 서울에서 각각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진상조사위 내부에서 조율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전 조사가 충분히 진행돼야 하고 대립적 사안이라 공개해야 된다는 청문회 원칙을 고려해서다.

청문회에 서게 되는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 송 위원장의 생각이다. 그날의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면 그 누구라도 청문회에서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송 위원장은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벌금이라고 하는 강제적 수단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동안 진실의 입을 열기를 거부하던 이들을 국민들 앞에 세울 수 있을 것”이라면서 “모든 정황 증거를 준비해 이들이 진실을 말할 수 밖에 없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35년 전 광주청문회를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행방불명자와 암매장지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추가 발굴을 계획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53개소의 암매장 제보지 중 중복되거나 이미 발굴이 진행된 지역(23개소)을 제외하고 30개소에 대해 진행중인 암매장 발굴 타당성 용역이 오는 2월께 나옴에 따라 최소 12~15곳의 장소에 대해서는 발굴작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방불명자 발굴의 단초가 될 지난해 9월 5·18 행방불명자 열경선씨의 유전자 조사 결과를 포함한 옛 광주교도소 유골에 대한 유전자 검사결과에 대한 용역검수작업이 마무리 되면 다음달 안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조사위의 2기 활동 필요성에 대한 입장도 내비쳤다. 핵심 사안을 먼저 처리하더라도 모든 진실을 밝히기에는 이번 진상조사위의 활동으

로 모두 마무리 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진상조사위는 2000명 정도의 계엄군으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받아 책임자를 찾는 상향식 조사를 진행했다. 이러한 조사 방식으로 “조준경으로 조준 사격했다”, “내가 대검을 찌른 가해자다”라는 일부 계엄군들이 진실을 밝히는 성과를 얻었음에도 대부분의 계엄군들은 코로나19 등을 핑계로 아예 조사에 응하지 않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

송 위원장은 “핵심 사안인 발포나 암매장은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조사 분야가 남아 있다”면서 “5·18은 중대 인권침해 사건의 하나로 공소시효가 배제되고 행불자 문제는 계속범죄라는 점에서 정권과 진영을 초월해 철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계속 대두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진상조사위 모든 인원을 동원해 남은 기간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결과를 내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5·18진상조사위는 2019년 12월 27일 출범했고, 특별법 개정으로 총 4년(2+1+1)간의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원아 5명 모집도 어렵다” 병설유치원 폐원 위기

광주 동운초 유치원 등 13곳 휴원 행정예고... 126곳 중 67% 2개 학급으로 명맥 유지

출생률 급감으로 광주지역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폐원 위기에 몰리고 있다.

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동운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13개 병설유치원의 휴원에 따른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를 했다.

이들 13개 병설유치원은 2023학년도 유아 모집을 했지만 공립 유치원 학급편성 최소 기준인 5명을 충족하지 못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병설 유치원은 출생률 급감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2017년 1만120명이었던 광주지역 신생아 숫자는 2018년 9105명, 2019년 8364명, 2020년 7318명, 2021년 7056명으로 해마다 급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학년도 4곳, 2022학년도 9곳의 병설유치원이 휴원을 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휴원 유치원 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 휴원 예정인 병설유치원 13곳 가운데 치

평초 병설유치원 등 4곳은 3년 연속(2021~2023) 휴원을 하게 됐다.

시교육청 규정대로라면 3년 연속 원아 모집을 충족하지 못하면 폐원하게 돼 있다.

올해 광주 동, 북, 치평, 월곡초 병설유치원이 3년 제한에 걸려 폐원 위기에 놓였으나, 시교육청이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폐원을 1년 유예한 상태다.

현재 운영 중인 병설유치원도 한도학급(2개 학급)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광주 전체 126곳 병설유치원 가운데 67%가 한도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내년이 고비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저출산 현상 심화에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결혼이 줄고 신생아도 격감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던 2019년에 태어난 원생들을 모집해야 하기 때문이다.

원아 수가 병설유치원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지

만, 경직된 교육프로그램 운영도 원인이라 지적도 있다.

교육부에서 정한 교과 프로그램만을 운영하는 병설유치원이 다양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는 사립 유치원에 경쟁력에서 밀린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이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병설유치원보다 통학버스 제공 등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립을 더 선호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은 휴원 유치원 증가 추세에 대해 아동 인구감소라고만 핑계를 둘러둘 게 아니라 미달 원인 파악과 개선책을 마련해 적극 홍보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병설유치원을 폐원하면 다시 설립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폐원을 막기위해 학부모 대상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 광주시교육청 장우삼 부교육감 임명



신으로 전남대 경영학과 학사, 미국 펜실베이니아

광주시교육청 신임 부교육감에 장우삼(59·사진) 인천부교육감이 임명됐다.

시교육청은 장우삼 신임 부교육감이 1일자로 부임했다고 밝혔다.

장 부교육감은 목포 출신으로 전남대 경영학과 학사,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교육학 석사를 마쳤다. 행정고시 37회로 1994년 4월 공직에 입문했으며 부경대 사무국장,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 교육과학기술부 사학감사팀장, 인천교육청 부교육감을 역임했다.

장 부교육감은 “공직의 마지막을 고향에서 보낼 수 있게 됐다”며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가족의 의견을 청취해 교육발전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年 1.7% 동결

2021년부터 5학기 연속

올해 1학기 정부의 대학 학자금 대출 금리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묶인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연 1.7%로 동결한다고 2일 밝혔다. 2021년 1학기부터 5학기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학자금 대출 대상 및 지원도 늘어날 전망이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기존 대학생, 대학원생에서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교육부 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 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 과정’을 수강하는 학습자가 대상이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상환기준소득을 2394만원(공제 후 1510만원)에서 2525만원(공

제 후 1621만원)으로 인상하며 지원 대상자도 모든 유형의 대학원 석·박사 학위 과정 이수자로 확대한다.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가 종료된 자립 준비 청년과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학부생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생활비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학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등록금대출의 경우 4일부터 4월 26일까지, 생활비 대출의 경우 4일부터 5월 18일까지 장학재단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 과거 고금리 학자금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 대출’도 추진한다.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일반상환 학자금을 대출받고 잔액이 남은 경우 4일부터 6월 22일까지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전환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 지방병무청, 12일부터 병역판정검사 신청 접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2023년도 병역판정검사’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만 19세가 되는 2004년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중인 사람 등이다. 검사 희망일 하루 전까지 일자와 장소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병역판정검사는 2023년 2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실시하지만 광주·전남병무청 검사기간은 4월 14일부터 7월 26일과 9월 25일부터 12월 22일까지다.

신청 희망자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또는 병무청 모바일 앱에서 간편인증(e-병

무지갑, 민간인증서),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 가까운 지방병무청에서 신청가능하다.

광주·전남병무청 관계자는 “사전에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선택하여 원하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023년 3.22 ~ 4.19 묘이장 윤달 미리 준비하세요. 사전예약 필수!**

- 윤달 이장 하실 분
- 벌초, 묘지관리가 힘드신 분
- 선산을 한 곳으로 조성하고 싶으신 분
- 조상을 더 좋은 곳으로 모시고 싶으신 분
- 자연장을 선호하시는 분

**광주 전남 수목장 / 매장 / 봉안 이장전문업체**

**묘이장/화장/평장/납골/자연장 정원장묘**

상담문의 **062-412-6183**

장묘 관련 모든 상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